

오피니언

光日春秋

이만열



지난 11월 30일 서울대학교 사범대 교육정보원에서 열린 '교과서포럼 제6차 심포지움'을 계기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날 내놓은 것이 '한국 근현대사 대안교과서' 시안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고 있는 바를 극명하게 드러내 놓고 있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행사 시작 30분 만에 4.19혁명동지회 등 4.19관련 단체 회원 50여명이 단상을 점거, 심한 몸싸움을 벌여 행사가 중단된 것은, 논의자체를 이성적인 토론이 아닌 방법으로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허동대는 무책임성을 보인 것이다. 만약 그 날 이런 사건이 없었고 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도 '시안'이라는 말로만 계속 버티었을까.

'뉴 라이트 교과서' 논쟁

문제는 그들이 대안교과서에 담은 한국 근현대사의 내용이다. 보도된 대로라면, 언론측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았던 내용들은 한국 현대사에 나타난 사건들이다. 4.19를 비롯하여 5.16, 유신체제 및 5.18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었다. 4.19를 단순히 학생운동으로만 표기했고 4.19 후에 학생운동조직이 견제되지 않은 권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거기에 비해 5.16은 혁명으로 표기했고 산업을 주도할 대안적 통치집단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유신체제에 대해서도 영도적 권한을 지닌 대통령 등이

창조했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자원 동원과 집행능력을 크게 제고하는 체제라고 서술했다. 거기에 비해 5.18은 광주민주화항쟁으로 표기하고 발전과 중앙권력으로부터 광주지역의 소외가 누적인 탓으로 일어났으며 한국 사회에 반미감정을 유발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썼다.

교과서포럼의 이같은 서술은 문민정부 이래 대체로 존용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시각이나 의미규정과도 달랐고, 또 정부와 그런 시각을 반영하여 제작된 종래의 교과서들과도 많은 차이를 보였다. 좋게

말하면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반대로 말하면 '이념색채 수준'을 넘지 못한 쿠데타적 발상이다. 교과서포럼이 시안 교과서를 통해 던진 문제 중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기술한 대목에서 그들의 예상치 못한 시각이 드러나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설명하면서 농민과 지주가 해탈을 입었고 한국의 산업화를 위해 크게 기여한 것처럼 주장한다. 이런 관점이고 보니 광복 후의 기술부

본도 "친일파의 입지를 넓히는 쪽으로" 더 나아가서는 일본군 장교출신이었다던 박 대통령의 업적을 "조국 근대화작업"을 위한 측면만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에 의해

추진된 한일협정을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준" 긍정 일변도의 사건으로 기술했다. 그러나 이 시안은 한일협정에서 빠뜨린 대일청구권 문제와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고 있으며, 우리가 일본 교과서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제대로 거론하지 않았다. 비판자들이 뉴라이트 교과서를 두고 일본의 '새역모'를 연상하고 신친일파로 몰아치는 것은 이때문이다.

교과서는 그 사회가 합의한 기존의 가치관을 전제로 하여 후세들에게 미래 지향적 가치관을 제시하는 학습교재다. 따라서 학계나 사회 공론의 합의가 꼭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도, 기존에 출판된 것이든 미래에 출판될 것이든, 학계의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친 내용을 실어야 한다. 교과서포럼의 교과서 시안이 사회적인 합의나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 그들은 그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더구나 그들의 주장대로 기존 교과서의 대안으로 내 놓으려면 '역사전문가'들로 조직된 검증팀이 있어야 한다. 교과서는 아마추어들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퍼는 지면일 수는 없다.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주택 담보대출 이자 급등...서민 허리 휨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세가 심상찮다.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가산금리 인상, 금리우대한다 축소 및 폐지 등 주택담보대출 옥죄기에 나서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우려했던 '이자폭탄'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

은행권의 금리 인상 러시는 주택담보대출 급등에 따른 가계와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을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감축당국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문제는 금리 급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 빚을 얻어 집을 장만한 서민들의 몫인 점이다.

최근의 부동산 대란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됐다. 은행권 역시 집값 파동에 관습해 대출세일도 마다 않고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부추기다 이제 와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풀금리 인상을 핑계로 일제히 금리인상에 나서서 건 무책임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때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에증서(CD) 금리가 상승해도 각종 우대금리를 신설하면서 주택대출 금리를 내려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비판까지 받지 않았는가. 은행마다 연간 1조 원 이상 이익을 남기면서 예금금리 조정은 소홀히 하면서 대출금리는 재빨리 대폭 올리는 것은 횡포나 다름없다. 금리 인상이 금융위기의 사전방지 의장단이라고 해도 용단적 격식대로 급격하게 올리는 행위는 해도 너무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인상은 가계부실을 초래해 은행에 부대란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의 장기화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을 유도해 부실 가능성을 축소하고 부동산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 정부 역시 실수요자 서민들만이라도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감속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시의회 갈등 양상 불쌍 사남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없지만 도를 넘어섰다. 출범 6개월 밖에 안된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광주시의 앞날이 어두운 수밖에 없다.

광주시공무원노조는 최근 시의원들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와 의회의 건전한 견제와 감시, 균형을 통해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연대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최야 및 최고의 의원을 선정, 공개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시의원들을 평가, 공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시의원들에게 문제가 많더라도 공무원들이 시의원들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무원노조의 결정은 광주시의 행정감사 거부에 따른 시의회의 반발과 인턴보좌관제 예산 통과에 따른 갈등의 결과라

고 볼 수밖에 없다. 광주시와 시의회의 갈등은 뿌리 깊은 시의회의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박광대 시장의 개입설로 흥역을 치렀고 광주시가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기도 했다. 최근에는 시의회가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급 인턴보좌관제 예산을 통과시켜 마찰을 일으켰다.

광주시와 시의회의 갈등을 빚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무원들은 "과거 시의원들과 비교해 자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의원들을 비난하고 있고 시의원들은 "시장을 비롯해 간부들이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광주시와 시의회의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것은 두 개의 축이다. 두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광주시와 시의회의 소모적인 감정대립에서 벗어나 건전한 감시 및 견제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온도와 습도에 따라 음식물이 썩기 쉬운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이 '식중독 지수'다. 지난 2003년부터 식품의약품 안전청과 기상청이 식중독 지수를 개발, 식품 취급 종사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e-메일로 제공하고 있다. 100을 기준으로 86 이상이면 조리 즉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는 식중독 발생위험 메시지가 전달되고, 50~85 사이면 조리 후 4시간 이내 섭취를 권장하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나 식중독지수와 발생빈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지수가 낮은 겨울철에도 식중독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경기도와 강원, 전북에 이어 광주에서도 2개 초등

교 학생 88명이 학교급식을 먹고 설사와 복통, 구토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을 긴장시켰다. 식중독을 유발시킨 정확한 원인물질과 감염경로는 오리무중이다. 보건 당국 이 학생들의 가정집에서 노로 바이러스(Noro Virus)를 검출한 것이 고작이다. 미국 오하이오주 노워크(Norwalk)

러스에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질환으로는 감기 다음으로 많다. 일본 역시 겨울철에 발생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노로 바이러스 비상이 걸렸다. 무엇보다 단체 급식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이

걱정이다. 식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도 대책은 커녕 원인 규명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근심거리가 추가 됐다. 다행히 어찌부터 겨울방학이 시작됐다. 방학기간 만이라도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덜어지기를 기대한다. /김재필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기고

박찬용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로 한반도가 역사전쟁을 치루는가 싶더니 요즘은 주몽, 대조영, 그리고 연개소문의 일대기가 주말부터 우리의 안방극장에 경쟁하듯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주몽은 시청률 40%대를 넘는 인기 드라마다. 하지만 한민족사의 고대사를 복원시켜주며 국통맥을 알려주는 '환단고기'와 '북부여기' 등을 통한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드라마 주몽은 역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드라마에서 부여와 현토군, 그리고 한(漢)나라와의 관계 설정을 보면 부여와 한사군의 위치를 한반도 내로

태어났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유화부인과 해모수가 부부인연을 맺은 것으로 잘못 기술하고 있다. 넷째, 드라마에 나오는 여장부 소서노는 가상 연타발의 딸이 될 수 없다. 동부여를 떠난 주몽은 북부여의 국통을 잇게 되는데 BC 58년 북부여의 6대 고무서(高無胥) 단군이 즉자 주몽이 유명을 받들어 즉위하여 고구려를 세웠다. 주몽은 북부여의 고무서 단군의 둘째딸 소서노와 혼인하여 두아를 비류와 온조를 낳는다. 그러면 전 국민적인 드라마인 주몽에서 이러한 오류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중국의 한(漢)무제때 사기(史

드라마 '주몽' 역사왜곡 염려된다

한정, 일제 학자들이 주장하는 반도사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드넓은 만주와 동북아를 무대로 했던 고조선과 부여의 역사를 축소시킨 것이다. 둘째, 초대 단군왕검의 넷째아들인 부여가 나중 제후국 국왕으로 봉해지는데 이 나라를 학자들은 원시부여라고 부른다. 이후 부여는 대부여·북부여·동부여·중부여·남부여 등으로 수많은 부여가 존재 했다. 주몽에서의 부여는 엄밀히 말하면 동부여이다. 지금의 만주 흥릉강성 통하현에 위치한 동부여는 지리적으로 북부여에 맞혀 한나라와 교류를 할 수 없었다. 셋째, 드라마의 등장인물간 인척관계에서 주몽은 해모수의 아들이 아니다. 주몽은 해모수 둘째아들인 고진(高辰)의 손자인 고모수와 유화부인 사이에서

記)를 쓴 사마천 이후로 동방의 조선 역사를 일부러 자세히 기록하지 않게 되었다. 고구려의 김부식과 같은 역사가들은 중국인들이 써준 역사를 모방하기에 급급 했으므로 우리의 상고사는 실재가 없는 신화로만 남게 되었다. 고조선의 역사계승은 해모수가 세운 북부여를 거쳐서 열국시대와 사국시대(고구려·백제·신라·가야), 남북국시대(발해·신라)를 거쳐 고려·조선에 이르게 되는데 북부여를 역사속에서 지우면 뒤에 생겨난 국가들은 고조선과 전혀 관계없는 역사의 미아가 될 것 이라는 것을 중국의 사가들은 노렸던 것이다. 역사 드라마가 시청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어 만큼 이를 계기로 역사를 바로잡기위한 전 국민적인 운동이 태동되어 올바른 우리역사가 전면에 등장 했으면 한다. <리더스 학원 원장>

예식장 주변 주말마다 교통혼잡... 대책 모색해야

주말에 차를 타고 예식장 주변을 지나가 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예식장측이 주차장을 넉넉하게 마련하지 않아 하객들은 도로가에 차를 세워놓고 결혼식에 참석하기 때문이다. 예식장측은 아예 직원을 배치해 불법 주차를 유도한다. 주변을 지나다 보면 예식장측의 그런 행태에 기가 막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 차선이 불법주차로 메워져 있거나 차선 하나를 넘어 두 줄로 주차해놓은 경우도 있다. 결혼식이 끝날 때쯤엔 차가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긴장하고 운전해야 한다. 문제는

시민의식만이 아니다. 하객이아 어쩌다 한번 오는 결혼식장이겠지만 예식장측은 매주 겪는 일일텐데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건 장사속이 훤히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경찰도 딱히 제재하거나 단속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예식장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질서 좀 지켜서 주차를 해야한다. 주차장이 없거나 좁다면 스스로 인근에 주차장 대용으로 쓸 공터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도 아니면 근처 주차장과 연계해 몇 시간이라도 유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예식장 주변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태동·광주시 서구 서창동

기고

고영만



금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11번째로 수출 3천억 달러를 달성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과시한 한해였다. 광주·전남지역 수출도 여는 지역 못지않게 분발한 한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년 대비 20%를 초과하는 280억달러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 전국 수출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원화강세와 고유가지속, 국제경쟁심화 등 갈수록 열악해져가는 수출환경에서 이룩한 성과이기에 더욱 값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 우리 업체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주지하다시피 연초부터 불어닥친 급격한 환율하락이라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경기 둔화가 예상되면서 해외수요가 다소 위축될 것이고 국제유가는 악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관심사인 환율은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소폭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중소 수출기업에게 여전한 고통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많은 악재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희망을 가져 볼 만한 호재는 FTA의 성공적인 타결이다. 한-미 FTA의 조속한 타결 및 발효는 대미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우리의 전반적인 경제에 활력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타결이 된 상품분야에서의 아세안(ASEAN)과 FTA가 내년 상반기중

한미 FTA·BRICs 개척이 살길이다

고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수출수출을 감양당하고 심지어는 수출을 포기하는 업체까지도 속출했다. 원유 등 원자재가격 상승도 우리 수출의 발목을 잡았다. 이런 악재로 인해 올초 우리 수출은 한자리수 증가에 그치면서 불안한 출발을 보였으나 곧 두자리수 증가율을 회복하며 견실한 성장세에 접어들었다. 그러면 내년의 수출은 어떤가. 대체적인 전망은 금년보다는 둔화될 것이나 큰 변수가 없을 경우 전국적으로 10% 정도의 증가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전남 경우도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중력품목의 수출이 탄력을 받고 있어 전국 증가율보다 크게 높은 20% 가까운 증가세가 예상된다.

발효될 예정이므로 우리 지역의 경우 자동차·철강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확대도 예상된다. 우리 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어서 환율에 대단히 민감하므로 원-달러 및 원-엔환율 하락에 대비, 정부와 업계는 수출채산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업계는 끊임 없는 연구개발(R&D) 투자확대를 통한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또 신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해 지자체, 수출지원기관 등과 협조해 전시회·박람회에 적극 참가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를 계속 리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장>

국제청 좀 더 쉬운 연말정산 방법 마련했으면

국제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데 과연 간소화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연말정산은 근로 소득자에게는 절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누구든 공인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같은 가족이라도 만 20세 이상이면 개별적으로 모두 다 국제청이나 금융기관에 가서 일일이 발급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 같은 가족이라도 연로한 사람이나 타지에 있을 경우 어떻게 일일이 인증서를 받아 서류를 제출하겠는가. 적어도 한 가족이거나 피부양자라면 세대주 한 사람 앞에만 모든 것이 수속되어 있다면 좋을 것이다. ▲최명연·광주시 서구 유충동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등이 하나의 공인인증서로 한꺼번에 처리된다면 누구든 가졌는데 모든 식구들이 다 가서 개별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받는다는 것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인증서를 발급받고 컴퓨터에 다시 작업하여 출력하는데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려 정밀 신세대나 컴퓨터를 용이하게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다. 의료비도 비급여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고 누락된 내용이 더러 있어 다시 해당 병의원으로 가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이중고도 있다. 정부에서 더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최명연·광주시 서구 유충동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광주시 서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FAX 222-4918) (FAX 227-0118)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경 치 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 동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 지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시 업 2부 2200-55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